

2025년 10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음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홍태	10/5	[뉴스프라임]'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뉴스투나잇] 검찰 기능 중수청·공소청으로...세부 설계는 숙제	
안지연	10/12	[와이드11] 귀성길 안전하게..."장거리 출발 전 꼭 점검하세요" [와이드08] 역대 예산 들인 공공기관 온라인 홍보...구독자는 300명 미만	
김정원	10/19	[뉴스투나잇] 특별항공편 뛰우고 여행금지 검토..."80여명 안전 미확인" [뉴스리뷰] 캄보디아 사태 '네 탓' 공방..."尹 정부 책임" "이 대통령 나서야"	
김정원	10/26	[뉴스현장] 캄보디아 송환자 무더기 구속..."철저히 수사" [뉴스오늘] 20일부터 캡투자 안 된다...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있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10/5(일)	김홍태	지난 달 26일 뉴스프라임에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될 예정이고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범여권의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정부조직법 표결에 나섰는데요, 일방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년 동안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테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은 검찰개혁 쟁점	지적하신 기사는 정식 리포트 제작 전 주요 내용을 간추려 최대한 빠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두번만 트는 '임시' 리포트인 만큼, 대신 여야의 입장은 그 다음 시간대부터 방영된 다른 리포트(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뚫고 통과)에 반영되었습니다. 함께 지적하신 제도 개편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가, 필리버스터 부서들과 협업해

	<p>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는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반대하며,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과 함께, 지난 일요일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집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중대한 정치 현안을 빠짐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핵심 쟁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시청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논리와 근거를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피상적으로 다뤄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 후 수사와 공소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중요하지만, 검찰청 폐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의 큰 변화이기에 제도 개편의 장단점, 특히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때 기울 때 다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p>고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시청자들께서도 정치적 갈등 자체에만 머물지 말고 제도 변화가 사회와 민주주의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p> <p>지난주, 연합뉴스 TV의 단독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외부업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SNS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SNS 홍보 업무 등을 맡기는 것으로 지난 6월, 민간업체 A사와 5억 7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코이카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석 달간 올라온 일반 영상은 단 두 건으로 조회수는 30여 회와 160여 회, 현재까지 유튜브 구독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숫자로 나타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재외동포청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 한 업체와 9개월간 3억 3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SNS 운영과 관리를 맡겼지만 지난달 초 까지 늘어난 유튜브 구독자 수는 당초 목표치의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SNS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전체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의 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A사가 단독 응찰한 것이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홍보에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코이카 측의 설명을 잘 이해하신 것으로 믿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보도는 코이카 측의 해명을 단순 전달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 공공기관 SNS 홍보 예산 관리 실태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이카 측 해명은 반론 차원에서 기사에 포함시켜주는 게 의무였을 뿐입니다. 물론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의문이 많이 남는 반론이라면, 더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기사의 지난 3월 한 업체와 9개월간 3억 3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SNS 운영과 관리를 맡겼지만 지난달 초 까지 늘어난 유튜브 구독자 수는 당초 목표치의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SNS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전체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의 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A사가 단독 응찰한 것이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홍보에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코이카 측의 설명을</p>

		<p>전달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데요, 다양한 채널로 SNS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보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코이카는 정량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보도는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 정성평가 등 코이카에서 홍보 효과의 지표로 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도는 공공기관 예산 투입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코이카 측의 주장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쳤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구체적 근거와 검증을 제시해, 보다 풍부한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p>		<p>구글과 애플에 각각 400억 원, 200억 원대 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콘텐츠 규제나 공정한 수수료 체계 등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방송사업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쉬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보도가 앞부분에서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 등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지만, 뒷부분에서는 인앱결제 과징금 문제에만 집중한 점도 아쉽습니다. 콘텐츠 규제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이 보완되었다면, 제기한 문제를 보다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2025 10/19(일)	김정원	<p>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허위 정보 등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내용이나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가 있어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엔 10대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업 종료 뒤 가게에 숨어있기' 같은 영상을 따라해 무인점포 침입과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입니다.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만 9조 원에 달합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p>	2025 10/26(일)	김정원	<p>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비상한 시기여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를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기존 토지구역은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 등도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p>

<p>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보합세 내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서 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보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과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잘 설명했고, 시장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양면성을 보다 균형있게 다뤘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실수요자의 거래 위축, 전세난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정책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은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인데요. 규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놓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1,230세대 중 전세 매물이 딱 한 건만 나와 있습니다. 마포구의 1천여 세대 단지 역시 매물이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서울 전세 물량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대출은 예전보다 덜 나오는데 전셋값이 높아지니 세입자들은 이사보다 계약 연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허구역 확대로 캡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전세 시장에 매물이 덜 나오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셋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p>	<p>월세로 몰리며 지난달 서울 평균 월세는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도는 부동산 규제 강화가 낳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현장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조차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과 월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잘 드러냈습니다. 다만 문제 지적에 그쳐 해법 제시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상승이라는 현상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나 전문가들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었다면, 문제 지적을 넘어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p>
--	--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10. 0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2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달 26일 뉴스프라임에서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될 예정이고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범여권의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정부조직법 표결에 나섰는데요, 일방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년 동안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은 검찰개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는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반대하며,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과 함께, 지난 일요일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집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중대한 정치 현안을 빠짐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핵심 쟁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시청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논리와 근거를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편향적으로 다뤄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 후 수사와 공소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중요하지만, 검찰청 폐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의 큰 변화이기에 제도 개편의 장단점, 특히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시청자들께서도 정치적 갈등 자체에만 머물지 말고 제도 변화가 사회와 민주주의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26일 뉴스투나잇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담당해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가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담당해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들어갔던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내란과 외환 범죄 등 중대범죄를 맡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병립하면서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경쟁, 협력 구도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공소청

은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 업무만 담당한다고 하며,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검찰이 갖고 있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 의견도 작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세부 방안 도출을 주도할 정부 안에서는 최근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 인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것이고,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해 수사권 등을 조정·관리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인데요, 기존 검사들의 인사와 전직 과정에서 직급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와 전문가, 피해자, 검찰 의견까지 두루 반영해 1년 안에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고, 기존 검사들의 전환과 보완수사권 논쟁 등 핵심 쟁점을 시청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불편이나 편익은 무엇인지는 사례를 들어서라도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방송에서 도식화하거나 그림 자료를 활용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편해보였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가 필요한지는 어떠한 문제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27일 와이드 11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온라인 전산 서비스들이 멱통이 됐다면서,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는 상태여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 상황 전했습니다.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정보시스템 책임 운영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가동되는 국가 행정서비스는 647개로, 먼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와 공무원 전자 우편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부처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통계 발표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멱통이고, 재정정보 포털인 '열린재정'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도 접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정부24를 비롯해 실생활과 직결되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주요 민원·인증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건 가능하지만, 영상신고나 웹사이트 신고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도 멱통이 됐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택배 이용이 많은 시기인데, 우체국 내부적으로 접수 물량, 발송 등 전산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며 불편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져 소요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체국 금융도 ATM 이용과 입·출금, 그리고 이체 등이 중지된 상태로, 정부는 민원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도록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면, 우체국 등 과급력이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스템 복구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민 불편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면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

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다루며, 정부 주요 부처 홈페이지부터 정부24,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지연의 원인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앞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왜 이런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이 앞으로 방송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화면이나 인터뷰, 복구 현장 모습 등이 추가되면 좀 더 생생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만큼 불편이 장기화되더라도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와이드08에서는 올해도 화려한 불꽃을 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백만 인파가 몰렸다면서, 국내 최대 불꽃축제인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밤하늘을 눈부시게 밝힌 불꽃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특별한 가을 밤을 보냈지만, 치열한 '명당 쟁탈전'은 오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울타리 앞이든 비좁은 구석이든, 작은 공간이라도 보이면 일단 자리 를 깔고 보는데요, 막이 오르고, 높이 솟아오른 폭죽이 밤하늘을 눈부시게 밝히며 쏟아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캐나다팀에 이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국팀이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케이팝 테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에 맞춰 '불꽃 폭포'가 쏟아지자 시민들이 매우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처럼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화려하게 수놓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특별한 토요일 밤을 보냈는데요, 올해도 1백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일대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지만, 경찰과 주최측의 안전 관리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간간이 자리나 시야 문제로 시민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있었고 자리값을 요구하는 바가지 상술도 있었으며, 개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에서의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허지나 페트병, 뜯자리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은 올해도 반복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불꽃축제 보도는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잘 담아내며, 시민들이 함께 즐긴 특별한 밤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지만, 백만 인파 운집이라는 상황 속에서 안전대책과 예방 조치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10. 12.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2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대 열흘로 이어지면서 귀성, 귀경길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차량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차량 점검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정비소를 찾아 차량을 점검하는 현장을 담았는데요, 명절에는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차를 25년째 타다 보니 장거리를 가려면 안전 문제도 있어 점검을 받게 됐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보도는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곳들도 발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비사는 체크리스트에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적어 제공하는데요, 이를 자주 가는 정비

소에 보여주면 자세한 설명 없이 추가 정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대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타이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고속도로 사망사고 70%는 타이어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는 정비사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엔진 계통에서는 엔진오일과 냉각수, 부동액 등의 양을 체크하고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 상태도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체로 인해 야간 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전조등과 후미등, 브레이크등, 비상등의 작동 여부도 점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 시 차량 점검의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이동량 증가와 교통 혼잡, 도로 정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청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연휴 시작에 맞춰 보도를 전달해 보도의 시의성을 갖췄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유발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보도와 전문가의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져 보도의 신뢰성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자막을 통해 지자체별로 추석 맞이 무상 차량 점검이라는 정보는 전달되었지만 무상 차량 정비소 위치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보도를 통해 점검의 필요성은 충분히 전달했으나 점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보도 내용이 더욱 강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서비스, 사업 내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막대한 비용 투입 대비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의 단독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외부업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SNS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SNS 홍보 업무 등을 맡기는 것으로 지난 6월, 민간업체 A사와 5억 7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코이카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석 달간 올라온 일반 영상은 단 두 건으로 조회수는 30여 회와 160여 회, 현재까지 유튜브 구독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숫자로 나타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 한 업체와 9개월간 3억 3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SNS 운영과 관리를 맡겼지만 지난달 초 까지 늘어난 유튜브 구독자 수는 당초 목표치의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SNS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전체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의 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A사가 단독 응찰한 것이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홍보에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텐데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코이카 측의 설명을 전달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데요, 다양한 채널로 SNS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보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코이카는 정량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보도는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 정성평가 등 코이카에서 홍보 효과의 지표로

심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도는 공공기관 예산 투입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코이카 측의 주장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쳤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구체적 근거와 검증을 제시해, 보다 풍부한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와 시간을 보내려는 빨결음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형 산불과 극한호우 피해가 잇따랐던 경남 산청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복구가 더딘 탓에 명절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른데요, 산사태 피해 지역은 길이 끊긴 탓에 성묘를 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의 명절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철제 웜스와 출입 통제 팻말을 화면에 담아 적막감이 감도는 현장을 비쳤는데요, 올해 산청에선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가 더디다보니 추석을 외부 시설에서 보내는 이재민만 220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성묘객들은 산사태로 길이 끊겨 성묘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도 전했는데요, 출입통제 소식을 뒤늦게 접해 차를 돌리는 성묘객들의 인터뷰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 농민들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산청은 땅기, 단감 등 제수용, 선물용 과일 주산지이지만 농경지가 불타거나 물에 잠겨 명절 대목은 고사하고 내년, 내후년 농사마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일상과 명절이 뒤틀린 피해 지역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 현장에 나가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담았는데요, 산사태로 길이 끊겨 성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며 재해의 여파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전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풍경과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을 담은 모습이 주로 소개되는데요, 이번 보도는 여전히 도움과 온정이 필요한 현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재해 피해 지역의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군의 명절 분위기를 담은 유사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보도는 성묘객의 인터뷰만 추가된 형태로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성이 유사한 보도가 이어져 같은 내용을 반복한 인상을 보였는데요, 현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나 정보 제시 등을 앞선 보도와의 차별성이 더욱 돋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계산기로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표를 발권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됐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소외감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서울시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학습에 나선 모습을 담았습니다. 보도에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낯선 공간에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자리하면 예매부터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60세 이상 고연령층 중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7.7%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디지털 소외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거점센터 7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은 물론 정서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학습에 나선 어르신들은 처음엔 키오스크 사용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반복 사용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익숙해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참여한 강사는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도는 이 외에도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존중하자는 의미의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 현장에 주목했습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된 현실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전달했는데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과 자신감 회복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의견을 전달해 교육의 취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고령층의 사회적 소외와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고령층에게는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세대 간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와 자신감 회복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인식을 담은 내용을 함께 전달한다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5. 10. 19.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2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지정을 검토하고, 특별항공편까지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범죄조직에 의한 20대 대학생 사망 사건을 포함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행경보 상향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일 수도 프놈펜 지역에 여행경보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최고 수위인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 지정을 고려 중입니다. 김진아 외교2차관을 단장으로 현지에 급파되는 합동대응팀은 구금된 우리 국민 중 피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할 방침입니다. 3개월째 공석인 대사 자리엔 외교부 본부 대사가 임시 파견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한 신고건수가 총 330건으로, 이 중 80여 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결 건수는 260건으로, 현지 경찰 체포, 구조 후 추방, 자력탈출, 귀국, 가족과 연락 재개 등 안전이 확인된 경우가 종결 처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여행경보 격상, 특별항공편 투입, 합동대응팀 구성 등 다각적인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3개월째 공석인 대사 자리가 왜 그동안 방치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했고, '종결 처리'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260건이 종결됐다고 하지만 '자력탈출'이나 '가족과 연락 재개'의 경우 실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 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세분화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경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협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고, 김건 의원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백 사태를 거론하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의 전 정부 책임론과 국민의힘의 현 정부 대응 촉구를 모두 다루며 정치권의 시각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80여 명의 국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거 책임 규명과 현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보도는 여야의 공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지금은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비판적 시각을 함께 제시했다면 더욱 의미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허위 정보 등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내용이나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가 있어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엔 10대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업 종료 뒤 가게에 들어 있기' 같은 영상을 따라해 무인점포 침입과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입니다.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견어간 인앱결제 수수료만 9조원에 달합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00억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콘텐츠 규제나 공정한 수수료 체계 등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방송사업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쉬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보도가 앞부분에서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 등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지만, 뒷부분에서는 인앱결제 과징금 문제에만 집중한 점도 아쉽습니다. 콘텐츠 규제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이 보완되었다면, 제기한 문제를 보다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 수가 15년 사이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K-뷰티를 넘어 이제는 K-의료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한국에 오면 예뻐진다는 '코리아 글로우업' 웹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의료관광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은 15년 사이 117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1조 원을 넘어서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의료관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장기 체류로 인한 숙박, 쇼핑 등 관련 소비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K-의료관광의 성장세를 구체적으로 통계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15년 사이 피부과 외국인 환자가 117배 증가했다는 수치와 의료 소비액 1조 원 돌파는 산업의 규모를 잘 보여줬고, '코리아 글로우업' 웹린지 같은 SNS 트렌드를 소개하며 현상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우려되는 점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부족했습니다. 의료관광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대응 체계나 불법 브로커 문제, 과잉 진료 우려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방적인 홍보성 보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안전한 의료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되었다면 더욱 균형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20대의 고용난도 심화하고 있어 인구 구조 악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지난해 처음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 명,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에 밀린 것은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20대 소외 현상도 뚜렷합니다. 20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악화됐는데,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20대 고용난이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질 경우 인구 구조 악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이상 인구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인구 통계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줬고, 20대 고용난 문제까지 함께 다루며 인구 문제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청년 세대의 삶과 직결된 현실임을 잘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 비용 증가, 세대 간 부양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었다면 시청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5. 10. 26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2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4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됐습니다. 현재까지 구속심문을 받은 피의자는 모두 구속된 건데요.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약속하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64명 중 49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심사가 진행된 4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고, 앞서 구속된 1명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등 캄보디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송환자에 대한 영장심사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는 캄보디아 송환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은 피의자 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과 수사 진행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다만 보도가 송환 이후 절차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시청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구조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어, 송환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보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다뤘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캡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비상한 시기여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를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캡투자가 차단됩니다. 기존 토지구역은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 등도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둘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보합세 내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등으

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보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과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잘 설명했고, 시장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양면성을 보다 균형있게 다뤘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실수요자의 거래 위축, 전세난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명했다면, 시청자들이 정책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은 사실상 쌔가 마른 상황인 텐데요. 규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놓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1,230세대 중 전세 매물이 딱 한 건만 나와 있습니다. 마포구의 1천여 세대 단지 역시 매물이 세 건에 불과한 정도로 전세는 쌔가 많았습니다. 서울 전세 물량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대출은 예전보다 덜 나오는데 전셋값이 높아지니 세입자들은 이사보다 계약 연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구역 확대로 잭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전세 시장에 매물이 덜 나오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셋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물리며 지난달 서울 평균 월세는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도는 부동산 규제 강화가 놓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현장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조차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과 월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잘 드러냈습니다. 다만 문제 지적에 그쳐 해법 제시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상승이라는 현상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나 전문가들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었다면, 문제 지적을 넘어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VIP 특별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VIP 장사를 하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VIP 회원제 '프리미어 CEO'는 최대 2,600만 원의 연회비가 적용됩니다. 이들 VIP 회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일반 환자보다 2 일 넘게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VIP 회원 중 한 명이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을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포기하고, 유료 검진으로 연평균 수백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독자적인 법으로 설치된 국가 공공의료 대표 기관이어서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대병원의 VIP 특별회원 제도 운영 실태를 단독 취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464일 장기 입원 사례와 연평균 수백억 원의 유료 검진 수익 등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국가 대표 공공의료 기관의 공공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보다 표면적 현상 전달에 그친 점은 아쉽습니다. 보도는 VIP 회원의 장기 입원과 높은 수익을 문제로 제기했지만, 이것이 일반 환자의 진료 기회를 실제로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립대병원들과의 비교 분석이 제시되었다면 VIP 회원제 운영이 서울대병원만의 문제인지 국립대병원 전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코스피가 장중 3,900선에 바짝 다가서며 이를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893까지 올라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였지만 3,823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8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용거래 응자 잔고는 24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만 원, 50만 원에 균접했다가 하락 마감했고, 현대차와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김병수 창업자의 1심 무죄 판결로

6%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 고점 부담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등 피로감이 있지만, 당분간 우리 중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도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 보도는 코스피가 이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3,900선에 균접한 중시 강세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시장 과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급등하는 중시에 대한 경고나 우려의 목소리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전문가의 낙관적 분석만을 주로 소개하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각했지만, 신용거래 응자 잔고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빛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열 우려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균형 있게 제시되었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